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The Economic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원종욱·장인수

KIHASA



현안보고서 2015-1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The Economic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발행일 2015년 9월
저자 원종욱·장인수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가격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43-1 93330

Excutive Summary	1
1. 서론	5
2. 미시/거시사회계정행렬 구축	8
3.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16
4.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24
5.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8
참고문헌	31
부록	
기초연금 규모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비율 추이	32

1. 연구의 목적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현금성 사회보장급여의 세대 간 형평성 및 세대 내 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연금 정책적 실효성 제고, 정책방향 개선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론 : 사회계정행렬(SAM : Social Accounting Matrix)

- 거시사회계정행렬 :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구축
- 미시사회계정행렬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가교행렬 구축

3. 분석내용

□ 재정효율화 전제

- 재정효율화는 복지지출을 위해 타 부문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에서 다른 산업 부문으로의 정부지출 재원을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비율만큼 감액시켜 이를 기초연금 예산(2015년 기준 10조 880억 원)으로 투입하여 노인가구 자산(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투입

□ 경제적 파급효과 : 기초연금 지급 전후 승수행렬을 바탕으로 한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를 비교 분석

- 생산유발효과 : 특정 산업의 단위 생산 또는 매출 증가가 국민경제 생산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
- 소득유발효과 : 특정 산업의 단위 생산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과, 노인가구, 비노인가구별 소득창출효과 및 각 세대 내 소득분위별 창출효과를 산업별로 비교
- 소득재분배 효과 : 사회계정행렬과 지니계수

4. 분석결과

- 2015년 기준 10조 880억 원을 기초연금 예산으로 노인가구 자산(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였을 때, 전 산업 평균 생산/소득유발계수를 적용한 결과 기초연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 각 산업 생산유발계수와 가구 소득유발계수가 미세하게 하락
- 생산유발효과는 기초연금 지급 이전 약 30조 2천 900억 원, 기초연금 지급 이후 약 29조 700억 원 정도로 전체 생산유발액은 약 1조 2천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유발효과는 기초연금 지급 이전 약 7조 3천억 원, 기초연금 지급 이후 약 7조 2천억 원으로, 가구 전체 소득유발액은 약 1,3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다른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초연금을 노인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파급효과보다 더 큼을 의미함
 - 소득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모두 감소하는 것은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개선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감소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경제성장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노인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기초연금 지급 이후 모든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3), 도·소매 서비스(19)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26),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부문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감소

〈표 1〉 기초연금 지급 전, 후 공공산업과 민간산업 주요 부문 및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32개 사업 부문 합계) 비교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전산업 평균
	27	28	30	3	7	19	23	
기초연금 지급 전	2.7776	3.0929	3.3388	3.4341	3.0702	3.0326	3.1298	3.0028
기초연금 지급 후	2.6037	2.9082	3.1426	3.3537	2.9735	2.9661	3.0107	2.8824

주: 공공행정 및 국방(27), 교육서비스(28), 사회보험서비스(30), 음식료품(3), 화학제품(7), 도소매서비스(19), 금융 및 보험서비스(23)이며, 이하 동일함

○ 소득유발효과

- 기초연금 지급 이후 모든 부문의 소득유발계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0.7250→0.7121)
- 기초연금급여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기초연금의 소비 등으로 인한 경제순환에 따른 가구의 소득창출효과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달리 나타남
- 기초연금 지급 전후 전 산업 소득유발계수 평균의 절대값은 비노인가구(0.4418→0.4318)가 노인가구(0.2832→0.2803)보다 더 많이 하락함

<표 2> 기초연금 지급 이전 공공산업과 민간산업 주요 부문 및 전산업 평균 소득유발계수 비교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전산업 평균
	27	28	30	3	7	19	23	
기초연금 지급 전	0.8858	1.0862	1.1089	0.7155	0.5827	1.0278	1.1178	0.7250
기초연금 지급 후	0.8602	1.0559	1.0987	0.7081	0.5724	1.0090	1.1044	0.7121

<표 3> 기초연금 지급 이전 공공산업과 민간산업 주요 부문의 노인-비노인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유발계수 비중 비교

가구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전산업 평균
	27	28	30	3	7	19	23	
노인 가구	0.3739 (42.21%)	0.4529 (41.70%)	0.4708 (42.46%)	0.2452 (34.27%)	0.1902 (32.64%)	0.3279 (31.90%)	0.3804 (34.04%)	0.2832 (39.06%)
비노인 가구	0.5119 (57.79%)	0.6333 (58.30%)	0.6381 (57.54%)	0.4702 (65.72%)	0.3925 (67.36%)	0.6999 (68.10%)	0.7373 (65.96%)	0.4418 (60.94%)
합계	0.8858 (100.00%)	1.0862 (100.00%)	1.1089 (100.00%)	0.7155 (100.00%)	0.5827 (100.00%)	1.0278 (100.00%)	1.1178 (100.00%)	0.7250 (100.00%)

주: 괄호 안은 각 가구의 비중을 뜻함

<표 4> 기초연금 지급 이후 공공산업과 민간산업 주요 부문의 노인-비노인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유발계수 비중 비교

가구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전산업 평균
	27	28	30	3	7	19	23	
노인 가구	0.3671 (42.68%)	0.4451 (42.15%)	0.4686 (42.65%)	0.2440 (34.46%)	0.1883 (32.90%)	0.3245 (32.16%)	0.3780 (34.23%)	0.2803 (39.36%)
비노인 가구	0.4930 (57.31%)	0.6108 (57.85%)	0.6301 (57.35%)	0.4641 (65.54%)	0.3841 (67.10%)	0.6845 (67.84%)	0.7264 (65.77%)	0.4318 (60.64%)
합계	0.8602 (100.00%)	1.0559 (100.00%)	1.0987 (100.00%)	0.7081 (100.00%)	0.5724 (100.00%)	1.0090 (100.00%)	1.1044 (100.00%)	0.7121 (100.00%)

주: 괄호 안은 각 가구의 비중을 뜻함

4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재분배 효과 : 기초연금 지급 후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감소
 - 0.4944(2014년 상반기 : 기초연금 도입 전)→0.4322(2014년 기초연금 지급)→0.4067(2015년 기초연금 지급)

〈표 5〉 기초연금 지급 전, 후 지니계수 비교

기간	지니계수
2014년 상반기 : 기초연금 도입 전	0.4944
2014년 7월~12월 : 2014년 기초연금 지급	0.4322
2015년 기초연금 지급	0.4067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는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2011년 기준 48.6%로 OECD 평균 10.9%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했던 기초노령연금의 한계점이 크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탓에 현재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또한 상당히 낮다. 이러한 기초연금에 대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인빈곤율과 같은 사회경제지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노인계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소득보장효과와 현금 급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자산(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됨에 따라 정부지출이 산업 각 부문의 생산 증가에 기여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창출 효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동시에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도 완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데 따른 객관적 효과 분석을 통해 노인 계층의 생활 개선 효과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의 재정지출이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초연금의 현황과 분석방법론으로 적용될 사회계정행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기초연금 지급 전후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를 통한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와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나. 기초연금 현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930,000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1,488,000원 이하인 인구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¹⁾은 소득평가액

1)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0.7×(근로소득-520,000원)}+기타소득,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0,000원)-부채}×0.05(재산의 소득환산율,

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된다. 수급자 규모는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령인구의 약 7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기초연금 이전의 기초노령연금부터의 급여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인당 지급금액이 월 84,000원이었던 것이 지속 증가하여 2014년 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4월 이후 현재 지급금액은 202,000원이다. 이에 따라 급여지출 규모 역시 2008년 2.2조 원에서 2015년 예산기준 10.2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 기초(노령)연금 1인당 연금액과 급여지출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¹⁾	2015 ²⁾
1인당 연금액 (월액, 만원)	8.4	8.8	9.0	9.1	9.7	9.9	20	20.2
급여지출 규모 (조원)	2.2	3.4	3.7	3.8	4.0	5.3	6.9	10.2

주: 1) 월 200,000원(2014.07~2015.03)

2) 월 202,600원(2015.04~2016.03)

자료 : 보사연 내부자료.

A급여라고 하여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 급여에 의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이 때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A급여가 클수록 전체금액은 감소하는 지급산식에 의해 결정된다²⁾.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도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산정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A값이 큰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수급자의 수는 감소하고 감액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2008년 2,898천 명에서 2014년 4,22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 수급자의 경우에도 2013년 기준 110만 명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는 2014년 기준 약 6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68.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 5%)÷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표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수 (나/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수 (다/나)
2008	5,069	2,898	403	57.2%	13.9%
2009	5,268	3,630	719	68.9%	19.8%
2010	5,506	3,728	823	67.7%	22.1%
2011	5,701	3,818	916	67.0%	24.0%
2012	5,854	3,933	1,023	67.2%	26.0%
2013	6,251	4,045	1,131	64.7%	27.9%
2014)	6,665	4,220		63.6%	

주: 1) 기초연금 전환 후 2014년 8월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계 자료.
자료: 보사연 내부자료.

기초연금의 연도별 소요재원 장기전망은 크게 5년마다 A값을 반영하는 경우와 매년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를 고려하는 경우로 나누어 추계해 보았는데, 이들 두 가지 방식에 따른 급여지출 전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간략히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2015년 약 10조 2천 억원에서 2060년 214조 9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반해 후자의 경우 2060년 70조 4천 억원으로 전자에 비해 그 증가폭이 매우 작다. 이러한 추세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1인당 급여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전자가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1인당 급여액 역시 현재 202,000원에서 2060년에는 1,983,000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 반해, 후자의 경우 2060년 650,000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3〉 기초연금 소요재원 전망

연도	인상방식					
	5년마다 A값 반영		매년 CPI 증가		5년마다 A값 반영	매년 CPI 증가
	기초연금 지출규모 (억원)	기초연금 전액수급시 1인당 급여액 (월액, 만원)	기초연금 지출규모 (억원)	기초연금 전액수급시 1인당 급여액 (월액, 만원)	GDP 대비 (%)	GDP 대비 (%)
2014	73,077	20	73,077	20	0.5	0.5
2015	102,221	20.2	102,221	20.2	0.7	0.7
2020	167,621	24	146,595	21	0.8	0.7
2030	471,663	47.6	297,158	30	1.3	0.8
2040	943,259	82	460,368	40	1.8	0.9
2050	1,500,294	128.2	597,069	51	2.1	0.8
2060	2,149,426	198.3	704,432	65	2.2	0.7

자료: 보사연 내부자료.

2. 미시/거시사회계정행렬 구축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인 사회계정행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의의³⁾

국가경제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부문별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이다. 즉, 「국민계정」은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과 노동을 결합하여 특정 회계기간 중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어느 정도가 소비와 투자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일반적으로 EC (200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계정을 ‘행렬’ (matrix)로 표시하는 ‘국민계정행렬’ (National Accounts Matrix, NAM)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생산, 소득발생 계정 등에 있어 대차대조표방식인 T-계정 표시법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⁴⁾

3) 고제이 외, 2014의 제4장 제1절 사회계정행렬 부분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발췌, 정리하였음.

4) T-계정은 특정 회계기간 (대개 1년) 중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공급 균형을 나타내며, 이러한 이유로 이를 ‘공급-사용표’ (supply/use table)라고도 함.

그러나 국민계정의 행렬표시 방법도 부가가치와 최종지출간의 관계를 풀어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소득의 흐름 및 소득분배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를 확장하여 국민소득계정과 통합한 사회계정행렬(SAM)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업연관표의 경우 그 특성상 산업 간 생산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 원자재 및 중간재의 판매와 구매 관계 등의 제한적 특징으로만 언급하는데 반해, 사회계정행렬은 경제의 각 주체를 세분화하여 이들 세분화된 부문간의 거래와 소득이전 관계로써 경제구조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정행렬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와 최종지출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민계정을 산업연관표와 연결시킨 행렬로 표시하고,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국내 전체 산업별, 취업자 형태별, 소득계층별, 기업규모별 등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때 가교행렬을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계정이 세분화된 미시사회계정행렬의 경우 모든 범주의 거래에 대해 특정 지급단위 집단이 다른 수취단위 집단과 얼마나 교환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및 경제주체간의 소득흐름의 상호관계가 교차분류를 통해 표시된다. 특히 이는 원시자료와 같이 다양한 국내 가용통계를 활용할 경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신축적인 분류 및 분할이 가능한데, 이렇게 완성된 SAM은 국가경제 내 제도부문 및 경제활동부문간 소득분배·지출의 상호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거시사회계정행렬 구축

사회계정행렬의 각 계정은 행과 열의 교차 칸으로 표시되며, 관행적으로 수입은 행에, 지출은 열에 표시되어 한 계정의 수취와 다른 계정의 지급이 동시에 교차 분류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 순환을 나타내는 거시 사회계정행렬은 <표 4>와 같이 생산활동, 상품, 노동요소, 자본요소, 가구, 기업, 정부, 자본계정, 해외의 9개 계정으로 구성되며, 이때 주의할 점은 부문 간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전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제이 외, 2014).

〈표 4〉 거시 SAM의 구조

지출 수입	①생산 활동	②상품	③노동 ¹⁾	④자본 ¹⁾	⑤가구	⑥기업	⑦정부	⑧자본 계정	⑨해외 부문	합계
①생산 활동		국내 공급							수출	총산출
②상품	중간재 수요				가구소비		정부지출	투자		총수요
③노동	피용자 보수								국외수취 피용자보수	노동 소득
④자본	영업 잉여								국외수취 기업·재산 소득	자본 소득
⑤가구			임금	분배 이윤		이전거래	이전거래		경상이전	가구 수입
⑥기업				비분배 이윤	이전거래		이전거래		경상이전	기업 수입
⑦정부	생산세	수입생산 물세			소득세	법인세			경상이전	정부 수입
⑧자본 계정 ²⁾	감가 상각				가구저축	기업저축	정부저축		경상계정 잉여(흑자)	총저축
⑨해외 부문		輸入	국외지급 피용자 보수	국외지급 기업·재산 소득	민간해외 이전지출	기업해외 이전지출	정부해외 이전지출	경상계정잉 여(적자)		외환 지불
합계	총투입 (생산 비용)	총공급	노동소득	자본소득	가구지출	기업지출	정부지출	총투자	외환수취	

주: 1) 정부 고용 피용자도 정부가 아닌 가구구성원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정부계정의 생산요소로부터의 수입은 0임
 2) 자본계정(⑧)은 생산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감가상각과 가구기업·정부의 저축,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순자본이전을 모아 상품 및 해외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생산요소로서의 자본(④)과는 다른
 자료: 고제이 외(2014)

다. 미시 SAM 구축을 위한 가교행렬의 작성

사회계정행렬의 규모는 분석 목적과 가용자료에 따른 각 계정의 세분화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거시 SAM을 제어수치로 삼아 미시 SA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시통계와 표본조사자료의 연계를 위한 ‘가교행렬’ (bridge matrix)의 작성이 필요하다 (노용환, 2006). 5) 예를 들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계층별 소득분배’를 다루는 경우 경제

5) SAM의 유형은 관찰목적인가 아니면 분석목적인가에 따라 계정 구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관찰목적 SAM의 경우 연도별·국가별 등 비교대상에 따라 세부 계정의 유형이 결정되며, 분석목적 SAM의 경우는 연구자 목적에 부합하는 계정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내생계정인 가구 분류시 소득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주요 소득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함(고제이 외, 2014).

주체간 경상이전거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산업연관표」 상 부가가치 배분에 관한 기능별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 외에 소득계층별 수입·지출에 관한 자료가 요구된다(고제이 외, 2014).

본 연구의 미시 SAM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계정금액과 가구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연계성을 위한 가교행렬 작성을 위해, 생산활동, 상품계정 중 다음의 항목은 1)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30부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소분류 기준으로 하여 ‘의료 및 보건’,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는 사회보험서비스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거시 SAM 중 가구 부문의 미시분할(노인-비노인가구, 각각의 가구별 자산 10분위)이 필요한 계정이 존재한다. 가구 지출과 가구 수입 부문의 경우, 가구금융복지조사와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을 노인-비노인가구로 2단 구분, 이후 각 가구를 자산 10분위나 소득 10분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데 노인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이 매우 미미하므로, 자산(소득인정액) 10분위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구 수입 벡터의 분할의 경우 가구 수입 벡터의 다섯 가지 항목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임금은 가구금융복지조사의 자산으로 바꾸고 나머지 항목도 마찬가지로 가구금융복지조사의 항목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참고적으로 자산의 경우 가구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2014) 중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실물자산의 합이며, 세 자산항목은 다음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된다.

〈표 5〉 가구 수입 벡터의 미시분할을 위한 자산의 분류

항목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실물자산
세부항목	저축액, 적립식 저축(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펀드,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예치식 저축(예치식 저축펀드), 주식채권 등, 권리금, 기타저축, 현 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거주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자동차, 자동차 이외(자영업자 설비 및 재고자산, 건설 및 농업용 장비, 동물 및 식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및 예술품, 고가의 내구재, 자동차 이외 기타 지적재산권 등)

〈표 6〉 가구 수입 벡터의 가교행렬

가구별/ 자산별 소득분포		임금(근로소득) → 자산	분배이윤 (재산소득)	기업→가구 이전거래 (비경상소득)	정부→가구 이전거래 (이전소득)	해외→가구 경상이전 (연간소득)	
⑤가구	노 인 가 구	1분위	0.0042	0.0035	0.0073	0.0014	0.0009
		2분위	0.009	0.0064	0.0099	0.0063	0.0085
		3분위	0.0159	0.0015	0.0107	0.0008	0.0142
		4분위	0.0241	0.0176	0.0099	0.0016	0.019
		5분위	0.0279	0.0145	0.017	0.0049	0.0233
		6분위	0.034	0.0204	0.0216	0.0108	0.0276
		7분위	0.0416	0.0409	0.0258	0.0106	0.0328
		8분위	0.0516	0.0238	0.0237	0.0237	0.039
		9분위	0.0639	0.0324	0.0344	0.0299	0.0482
		10분위	0.0991	0.0834	0.11	0.0482	0.0737
	비 노 인 가 구	1분위	0.0129	0.0114	0.0294	0.0068	0.0093
		2분위	0.0246	0.023	0.0338	0.0254	0.0229
		3분위	0.0292	0.0219	0.0352	0.0229	0.0431
		4분위	0.0448	0.057	0.0439	0.0663	0.0519
		5분위	0.051	0.0681	0.0559	0.0905	0.0605
		6분위	0.0596	0.063	0.0637	0.1034	0.0772
		7분위	0.0702	0.0987	0.0759	0.1117	0.0866
		8분위	0.0842	0.0783	0.0723	0.1365	0.0977
		9분위	0.1015	0.103	0.1055	0.1211	0.1144
		10분위	0.1507	0.2312	0.2141	0.1772	0.1492
합계		1	1	1	1	1	

자료: 1)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2)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다음으로 가구 지출 칼럼 중 가구소비 부문은 가구금융복지조사가 아닌 가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가구동향조사와 가구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합(merge)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가구동향 원시자료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지출 칼럼 중 가구소비 부문을 제외한 가구 기업이전 거래, 소득세, 가구 저축, 민간해외이전지출의 경우에도 역시 가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가구 지출 중 가구저축⁶⁾의 경우 노인가구, 비노인가구로 나누고, 이후 각각의 가구를 연간균등화가구소득 10분위로 나눈 후 저축액을 적립식 저축(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 펀드,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예치식 저축(예치식 저축펀드) 주식 채권(주식, 채권, 기타(선물· 옵션)으로만 구분하였다.

6) 참고적으로 고제이 외(2014)에서는 가구를 연간균등화가구소득 10분위로 나눈 후 협의의 개념인 저축 및 적금(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저축 및 적금, 저축성보험료, 펀드, 유가증권 구입, 부동산 구입, 귀금속 구입, 보증금 제공의 항목의 합)으로 적용하여 가교행렬을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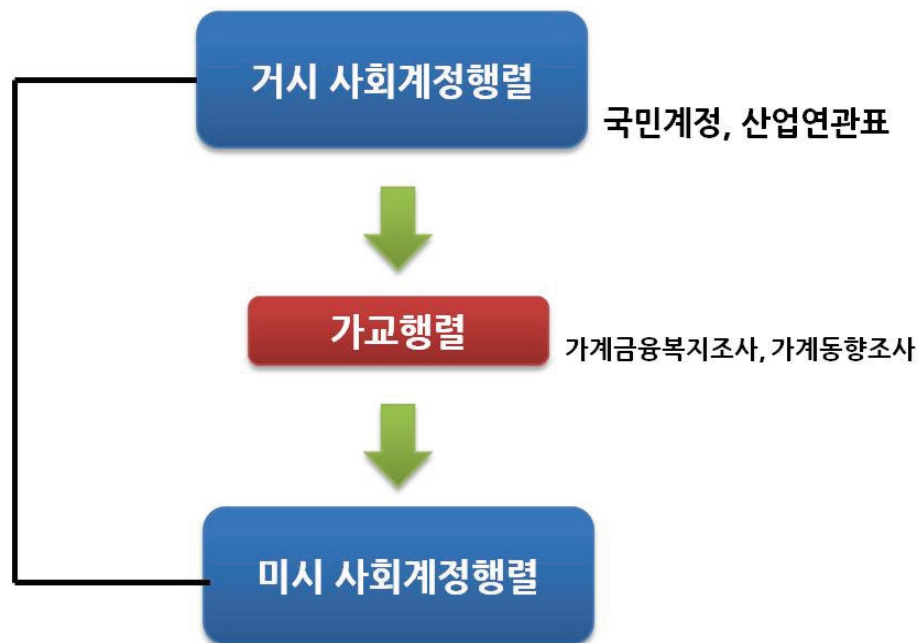
〈표 7〉 가구소비 부문을 제외한 가구소비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세부항목 분류

항목	가구→기업이전거래 (비소비지출)	소득세(연간소득)	가구저축(저축액)	민간해외이전지출 (가구지출)
세부항목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 담보대출용도별(담보 대출잔액) 전월세 보증금, 증권투자금, 부채상환, 사업자금, 결혼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예/적금/보험담보	소득세	적립식 저축(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 펀드,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예치식 저축(예치식 저축펀드) 주식 채권(주식, 채권, 기타(선물 옵션)	사적이전소득

라. 미시 SAM 구축

지금까지의 가교행렬을 바탕으로 가구가 20분위로 나누어진 관계로, 생산, 상품 64개 항목(각 32개 부문), 요소(노동, 자본) 2개 항목, 가구 20개 항목(노인가구 10분위, 비노인가구 10분위), 기업, 정부, 자본계정, 해외부문)의 총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즉, 총 90×90 행렬 $((64+2+20+4) \times (64+2+20+4))$ 로 나타나는 사회계정행렬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시가교행렬을 구축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는 2014가계금융복지조사와 2010가구동향조사 원시자료이다.

[그림 1] 모형의 체계도



마. 기초연금 투입 가정 : 재정효율화

1) 재정효율화에 따른 기초연금 자원 마련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의 재원이 복지 이외의 공공행정 및 국방 등 타 부문 정부지출의 감소를 바탕으로 마련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재정효율화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위해 구축된 미시사회계정행렬에서 각 산업 부문에 도달되는 정부지출금액 비율만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에서 약 5조 원이, 의료 및 보건 부문에서 2조 3천억 원,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약 2조 2천 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들 세 부문의 비중은 정부지출이 산업 부문으로 이전되는 금액의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재정효율화 : 기초연금 자원 마련을 위한 타 부문 정부지출 감소

부문	정부지출금액	정부지출 산업별 배분 비율	기초연금 자원 감액분	감액분을 제한 나머지 정부지출분
49.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683,147	0.37%	37,636.63	645,510.37
50. 건설	0	0.00%	0.00	0.00
51. 도소매 서비스	0	0.00%	0.00	0.00
52. 운송 서비스	0	0.00%	0.00	0.00
5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698,040	0.93%	93,550.14	1,604,489.86
54.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	0.00%	0.00	0.00
5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	0.00%	0.00	0.00
56. 부동산 및 임대	0	0.00%	0.00	0.00
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	0.00%	0.00	0.00
58. 사업지원서비스	0	0.00%	0.00	0.00
59. 공공행정 및 국방	90,826,543	49.60%	5,003,908.01	85,822,634.99
60. 교육서비스	39,789,259	21.73%	2,192,110.21	37,597,148.79
61. 의료 및 보건	42,713,487	23.33%	2,353,214.74	40,360,272.26
62. 사회보험서비스	2,237,659	1.22%	123,279.38	2,114,379.62
63. 사회복지서비스	3,436,051	1.88%	189,302.41	3,246,748.59
64. 문화 및 기타서비스	1,724,329	0.94%	94,998.48	1,629,330.52
합계	183,108,515	100%	10,088,000	-10,088,000

주: 기초연금 지급액은 2015년 기초연금 예산액인 10조 8백 8십억 원으로 설정하였음

2) 기초연금 가계 지급 시나리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대해 2015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액 10조 8백 8십억 원이 가계 분위별로 동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 구축된 거시사회계정행렬에서 정부지출이 가계에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제어치는 약 43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 비노인가구의 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 분포를 구하고, 이 금액 중 노인가구 하위 70%에만 각각 10조 8백 8십억 원을 7로 나눈 금액인 1조 4천 4백억 원을 분위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상정한 것으로 기초연금이 노인가구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거의 대부분 대상자에게 2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며,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표 9〉 기초연금 지급 시나리오

가구 구분	공적이전소득 (단위: 천원)	가교행렬	거시 사회계정행렬 제어치 (단위: 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전 공적이전소득 (단위: 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단위: 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후 공적이전소득 (단위: 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후 공적이전소득 비중
노인가구 1분위	86,715	0.0203	43,360,500	880,921.76	1,440,000	2,322,064.62	0.0434
노인가구 2분위	107,681	0.0252		1,093,911.50	1,440,000	2,535,054.36	0.0474
노인가구 3분위	84,040	0.0197		853,746.93	1,440,000	2,294,889.78	0.0429
노인가구 4분위	87,348	0.0205		887,352.29	1,440,000	2,328,495.15	0.0436
노인가구 5분위	101,731	0.0238		1,033,466.55	1,440,000	2,474,609.40	0.0463
노인가구 6분위	126,614	0.0297		1,286,248.37	1,440,000	2,727,391.23	0.0510
노인가구 7분위	125,956	0.0295		1,279,563.87	1,440,000	2,720,706.73	0.0509
노인가구 8분위	181,798	0.0426		1,846,852.50	-	1,846,852.50	0.0346
노인가구 9분위	208,292	0.0488		2,116,000.18	-	2,116,000.18	0.0396
노인가구 10분위	286,344	0.0671		2,908,916.11	-	2,908,916.11	0.0544
비노인가구 1분위	285,216	0.0668		2,897,456.97	-	2,897,456.97	0.0542
비노인가구 2분위	189,548	0.0444		1,925,583.32	-	1,925,583.32	0.0360
비노인가구 3분위	178,767	0.0419		1,816,061.12	-	1,816,061.12	0.0340
비노인가구 4분위	201,969	0.0473		2,051,765.98	-	2,051,765.98	0.0384
비노인가구 5분위	215,393	0.0505		2,188,137.93	-	2,188,137.93	0.0409
비노인가구 6분위	270,633	0.0634		2,749,310.95	-	2,749,310.95	0.0514
비노인가구 7분위	263,488	0.0617		2,676,726.21	-	2,676,726.21	0.0501
비노인가구 8분위	347,940	0.0815		3,534,658.56	-	3,534,658.56	0.0661
비노인가구 9분위	388,896	0.0911		3,950,723.05	-	3,950,723.05	0.0739
비노인가구 10분위	529,894	0.1241		5,383,095.84	-	5,383,095.84	0.1007
	4,268,263	1		43,360,500	10,088,000	53,448,500	1

3.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승수행렬 구축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승수분석은 정책 변화의 파급효과를 각 계정이 식별하고 있는 경제 전 부문에서 수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을 설정하는 단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변화에 따라 지출변화가 수반되기 쉬운 경제부문을 내생계정, 반대로 지출이 소득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경제부문은 외생계정으로 설정한다(고제이 외, 2014).

사회계정행렬을 바탕으로 한 승수 분석은 경제주체가 사회계정행렬 계정 내 기록한 지출 성향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정을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태적인 결과를 도출시키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고제이 외, 2014)

승수행렬을 도출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n 개의 내생계정으로 구성된 사회계정행렬을 다음과 같이 생산요소, 제도, 생산의 세 부문으로 분할할 때, A_n 을 이용하여 SAM 승수행렬 M_n 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⁸⁾ 즉,

$$y_n = A_n y_n + x = (I - A)^{-1} x = M_n x \quad (1)$$

$$\text{단 } A_3 = \begin{pmatrix} O & O & A_{13} \\ A_{21} & A_{22} & O \\ O & A_{32} & A_{33} \end{pmatrix}$$

y_n : 내생계정, A_n : 각 부문의 '평균지출성향' (average expenditure propensities)을 나타내는 분할행렬, x : 단위 주입(unitary injection)

외생변수의 지출 합을 나타내는 벡터를 x 라 할 때 앞선 식 (1)의 수식을 다음과 같이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제도부문까지 포괄하는 레온티에프 행렬 모형의 일반화하는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7) 고제이 외(2014)의 논리적 흐름 중 일부를 수정 발췌하여 정리함

8) 전술한 바와 같이 SAM의 각 칸을 열 합계로 나누어 구한 행렬을 '기술적 계수행렬' (technical coefficients matrix)이라 하며, 기술적 계수는 각 계정별 지출성향을 나타낸다.

$$y_3 = A_{33}y_3 + (A_{32}y_2 + x_3) = (I - A_{33})^{-1}(A_{32}y_2 + x_3) \quad (2)$$

식 (1)에서 SAM 승수행렬 $M_n = (I - A_n)^{-1}$ 은 외생계정 1단위 변화 (dx_n)가 내생계정의 '절대소득 변화' (dY_n)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총소득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M_n 의 요소 m_{ij} 는 계정 j 가 외생적으로 소득을 주입하는 1단위 발생에 따라 유발되는 계정 i 의 '총소득 효과' (gross income effect)를 의미하는 것이다(고제이 외, 2014)

한편, 노용환(2014)에 따르면, 승수행렬의 행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즉 "모든 부문에 대한 동일한 단위의 소득 주입 시 해당 행 계정 소득의 평균반응도를 뜻하고, 열의 합은 해당 열 계정 항목에 외생소득 주입(최종 수요 증가) 시 모든 내생 부문에서 증가된 직, 간접적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정효율화(타 부문 삭감)를 통한 기초연금 지급의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사회계정승수행렬을 각각 구축하고, 이를 비교하여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나. 생산유발효과

앞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수행렬의 각 계수는 외생부문의 최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32개 부문과 노동, 자본, 가구(은퇴가구-근로가구)가 각각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32개 산업 부문 각각의 열의 수치는 해당 산업 부문의 단위 원의 매출, 수요 증가는 직, 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생산유발계수만큼의 생산을 유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근원 외(2011)에 의하면 이는 특정 산업 부문의 생산액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가 발생한 경우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하여야 할 직, 간접적 산출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정효율화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 부문으로 지급(지출)되어야 할 정부 재원이 기초연금으로 노인가구 하위 70%에 지급됨에 따라 생산유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단위 1원의 매출, 수요 증가는 직, 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생산유발계수만큼인 3.3388, 3.2986원 만큼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 지급 이후 모든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미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료

품(3), 도·소매 서비스(19)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26),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부문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본 표의 생산유발효과는 개별산업이 미치는 승수이므로, 생산유발에 대한 절대적 크기는 산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감소는 우리 경제의 산업연관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표 10〉 기초연금 지급 전후 생산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28	29	30	31	32	평균값
기초연금 지급 전	2.7491	2.7312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
기초연금 지급 후	2.6353	2.6204	2.9082	2.9103	3.1426	3.1109	2.9436	-

<표 11> 기초연금 지급 이전의 32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분류	1	2	28	29	30	31	32	평균값
1. 농림수산물	1.3663	0.0399	0.0683	0.0615	0.0710	0.1103	0.0595	0.1084
2. 광산품	0.0018	1.2027	0.0026	0.0023	0.0022	0.0033	0.0024	0.0415
3. 음식료품	0.2410	0.0660	0.1154	0.0886	0.1195	0.1891	0.1073	0.1360
4. 섬유 및 가죽제품	0.0318	0.0272	0.0430	0.0385	0.0573	0.0616	0.0423	0.0820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345	0.0199	0.0430	0.0314	0.0501	0.0394	0.0397	0.0871
6. 석탄 및 석유제품	0.0518	0.0768	0.0548	0.0542	0.0519	0.0627	0.0505	0.0943
7. 화학제품	0.1255	0.0796	0.0692	0.2898	0.0770	0.0824	0.1083	0.1572
8. 비금속 광물제품	0.0052	0.0049	0.0074	0.0064	0.0077	0.0080	0.0085	0.0575
9. 1차 금속제품	0.0129	0.0229	0.0164	0.0183	0.0184	0.0204	0.0277	0.1079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034	0.0022	0.0026	0.0024	0.0028	0.0030	0.0025	0.0399
28. 교육서비스	0.0420	0.0480	1.2822	0.0643	0.0840	0.0691	0.0576	0.0881
29. 의료 및 보건	0.0229	0.0241	0.0404	1.2353	0.0377	0.0383	0.0284	0.0631
30. 사회보험 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375
31. 사회복지 서비스	0.0091	0.0102	0.0172	0.0136	0.0174	1.2144	0.0120	0.0481
32.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495	0.0579	0.0982	0.0893	0.1069	0.0907	1.2825	0.1019
합계	2.7491	2.7312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주: 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부표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 표(2009년 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서비스에는 사회복지사업(국공립),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아동, 성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초연금도 사회보험서비스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지출 부문 3-27 산업, 수입 부문 10-26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표 12〉 기초연금 지급 이후의 32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분류	1	2	28	29	30	31	32	평균값
1. 농림수산물	1.3041	0.0381	0.0642	0.0579	0.0668	0.1041	0.0568	0.1036
2. 광산품	0.0017	1.1479	0.0024	0.0021	0.0021	0.0031	0.0023	0.0396
3. 음식료품	0.2300	0.0630	0.1085	0.0835	0.1125	0.1784	0.1025	0.1304
4. 섬유 및 가죽제품	0.0308	0.0264	0.0405	0.0363	0.0539	0.0581	0.0410	0.0792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335	0.0194	0.0404	0.0296	0.0471	0.0372	0.0385	0.0843
6. 석탄 및 석유제품	0.0502	0.0744	0.0515	0.0511	0.0488	0.0591	0.0489	0.0911
7. 화학제품	0.1220	0.0774	0.0650	0.2731	0.0725	0.0777	0.1053	0.1521
8. 비금속 광물제품	0.0051	0.0047	0.0069	0.0060	0.0072	0.0075	0.0083	0.0559
9. 1차 금속제품	0.0125	0.0223	0.0154	0.0173	0.0173	0.0193	0.0270	0.1047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032	0.0021	0.0025	0.0023	0.0027	0.0028	0.0024	0.0375
28. 교육서비스	0.0404	0.0461	1.2056	0.0606	0.0791	0.0652	0.0554	0.0837
29. 의료 및 보건	0.0220	0.0232	0.0380	1.1638	0.0355	0.0361	0.0274	0.0599
30. 사회보험 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1.1295	0.0000	0.0000	0.0353
31. 사회복지 서비스	0.0087	0.0099	0.0162	0.0128	0.0163	1.1453	0.0116	0.0455
32.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476	0.0557	0.0924	0.0842	0.1006	0.0855	1.2338	0.0977
합계	2.6353	2.6204	2.9082	2.9103	3.1426	3.1109	2.9436	

주: 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부표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 표(2009년 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서비스에는 사회복지사업(국공립),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아동, 성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초연금도 사회보험서비스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3-27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라. 소득유발효과

가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 소득분위별 계층에 대한 소득유발효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구축한 사회계정승수행렬 중 각 산업부문 지출(각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가구 분위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생산유발효과 분석과 유사하게 기초연금 지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이전 기준으로 소득유발효과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1.1178), 사회보험서비스(1.1089), 교육서비스(1.086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 이후에는 모든 부문의 소득유발계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절대적 크기는 0.01 정도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문화 및 기타서비스(32) 산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급여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기초연금의 소비 등으로 인한 경제순환에 따른 가구의 소득창출효과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달리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 이후 음식료품 산업(3)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유발계수가 각각 0.2440, 0.4641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각각 34.45%, 65.54%의 비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지급 이후 파생된 음식료품 산업의 소득창출액 중 노인가구가 34.45%, 비노인가구가 6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비노인가구 모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자산) 유발효과가 큰 경제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초연금수급과 기초연금의 경제 순환 후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창출 효과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공공 부문보다 노인-비노인가구 간 소득유발계수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단위 소득창출액 중 약 65~68%이 비노인가구에서, 32~35%가 노인가구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기초연금 지급 전후 소득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26	27	28	29	30	31	32
기초연금 지급 전	0.6358	0.7221	1.0357	0.8858	1.0862	0.8624	1.1089	0.9151	0.7613
기초연금 지급 후	0.6256	0.7108	1.0216	0.8602	1.0559	0.8577	1.0987	0.9074	0.7544

〈표 14〉 기초연금 지급 이전 32개 산업 부문의 가구분위별 소득유발효과

가구소득분위	1	2	26	27	28	29	30	31	32
67. 노인가구소득 1분위	0.0081	0.0081	0.0113	0.0089	0.0113	0.0096	0.0114	0.0095	0.0087
68. 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03	0.0107	0.0158	0.0129	0.0159	0.0133	0.0162	0.0135	0.0120
69. 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15	0.0130	0.0208	0.0178	0.0217	0.0174	0.0224	0.0184	0.0153
70. 노인가구소득 4분위	0.0168	0.0188	0.0297	0.0253	0.0307	0.0248	0.0318	0.0262	0.0219
71. 노인가구소득 5분위	0.0181	0.0206	0.0331	0.0284	0.0348	0.0276	0.0361	0.0293	0.0243
72. 노인가구소득 6분위	0.0198	0.0233	0.0385	0.0335	0.0409	0.0320	0.0425	0.0344	0.0280
73. 노인가구소득 7분위	0.0265	0.0302	0.0484	0.0415	0.0508	0.0403	0.0526	0.0428	0.0356
74. 노인가구소득 8분위	0.0262	0.0321	0.0546	0.0484	0.0582	0.0452	0.0616	0.0493	0.0394
75. 노인가구소득 9분위	0.0330	0.0403	0.0682	0.0602	0.0719	0.0565	0.0747	0.0615	0.0492
76. 노인가구소득 10분위	0.0702	0.0760	0.1166	0.0971	0.1167	0.0975	0.1215	0.1013	0.0869
77. 비노인가구소득 1분위	0.0132	0.0132	0.0168	0.0132	0.0167	0.0142	0.0167	0.0141	0.0129
78. 비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68	0.0175	0.0231	0.0187	0.0235	0.0194	0.0235	0.0197	0.0174
79. 비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91	0.0216	0.0301	0.0257	0.0318	0.0250	0.0320	0.0266	0.0221
80. 비노인가구소득 4분위	0.0275	0.0309	0.0425	0.0361	0.0447	0.0354	0.0450	0.0374	0.0313
81. 비노인가구소득 5분위	0.0299	0.0341	0.0469	0.0402	0.0497	0.0390	0.0501	0.0415	0.0344
82. 비노인가구소득 6분위	0.0327	0.0386	0.0535	0.0466	0.0574	0.0444	0.0579	0.0478	0.0389
83. 비노인가구소득 7분위	0.0441	0.0502	0.0666	0.0571	0.0706	0.0555	0.0711	0.0589	0.0489
84. 비노인가구소득 8분위	0.0421	0.0517	0.0745	0.0660	0.0809	0.0616	0.0817	0.0673	0.0537
85. 비노인가구소득 9분위	0.0544	0.0663	0.0913	0.0807	0.0989	0.0756	0.1000	0.0823	0.0659
86. 비노인가구소득 10분위	0.1155	0.1250	0.1534	0.1277	0.1591	0.1282	0.1599	0.1333	0.1143
합계	0.6358	0.7221	1.0357	0.8858	1.0862	0.8624	1.1089	0.9151	0.7613

주: 3-25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표 15〉 기초연금 지급 이후 32개 산업 부문의 가구분위별 소득유발효과

가구소득분위	1	2	26	27	28	29	30	31	32
67. 노인가구소득 1분위	0.0081	0.0081	0.0114	0.0089	0.0113	0.0096	0.0114	0.0095	0.0087
68. 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03	0.0107	0.0159	0.0129	0.0159	0.0133	0.0163	0.0136	0.0120
69. 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15	0.0131	0.0209	0.0179	0.0218	0.0174	0.0225	0.0185	0.0154
70. 노인가구소득 4분위	0.0168	0.0189	0.0298	0.0254	0.0308	0.0249	0.0319	0.0263	0.0220
71. 노인가구소득 5분위	0.0181	0.0207	0.0333	0.0285	0.0350	0.0277	0.0362	0.0295	0.0244
72. 노인가구소득 6분위	0.0199	0.0235	0.0388	0.0337	0.0412	0.0322	0.0427	0.0346	0.0282
73. 노인가구소득 7분위	0.0266	0.0303	0.0487	0.0417	0.0511	0.0405	0.0529	0.0431	0.0358
74. 노인가구소득 8분위	0.0256	0.0315	0.0536	0.0466	0.0562	0.0448	0.0608	0.0488	0.0389
75. 노인가구소득 9분위	0.0324	0.0395	0.0669	0.0580	0.0693	0.0560	0.0737	0.0608	0.0486
76. 노인가구소득 10분위	0.0688	0.0745	0.1145	0.0935	0.1125	0.0967	0.1200	0.1001	0.0858
77. 비노인가구소득 1분위	0.0130	0.0129	0.0165	0.0127	0.0161	0.0141	0.0165	0.0140	0.0128
78. 비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65	0.0171	0.0226	0.0180	0.0227	0.0192	0.0233	0.0195	0.0172
79. 비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87	0.0212	0.0295	0.0248	0.0307	0.0248	0.0316	0.0263	0.0218
80. 비노인가구소득 4분위	0.0270	0.0303	0.0417	0.0347	0.0431	0.0351	0.0444	0.0369	0.0309
81. 비노인가구소득 5분위	0.0293	0.0334	0.0460	0.0387	0.0479	0.0387	0.0495	0.0410	0.0340
82. 비노인가구소득 6분위	0.0321	0.0378	0.0525	0.0449	0.0553	0.0441	0.0572	0.0473	0.0385
83. 비노인가구소득 7분위	0.0432	0.0492	0.0654	0.0550	0.0681	0.0550	0.0702	0.0582	0.0483
84. 비노인가구소득 8분위	0.0413	0.0506	0.0731	0.0635	0.0780	0.0612	0.0807	0.0665	0.0530
85. 비노인가구소득 9분위	0.0533	0.0650	0.0896	0.0777	0.0954	0.0750	0.0988	0.0814	0.0651
86. 비노인가구소득 10분위	0.1132	0.1225	0.1506	0.1230	0.1535	0.1272	0.1579	0.1318	0.1129
합계	0.6256	0.7108	1.0216	0.8602	1.0559	0.8577	1.0987	0.9074	0.7544

주: 3-25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4.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 지니계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지니계수가 0일 경우 완전균등분배로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1일 경우에는 완전불균등분배를 의미한다. 즉,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지고,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경우 0에 가까워짐을 파악할 수 있다. 하기된 식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Y_i - Y_j|$ 의 값이 감소할 때 지니계수가 낮아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분위별 소득의 격차가 작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G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n : 인원 수, μ 는 집단 평균소득, Y_i 는 개인 i 의 소득

앞서 언급한 미시사회계정행렬 구축을 위해 사용되었던 2014 가구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기초연금 도입(2014.7) 이전 자료이므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기간을 정하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16>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간 설정

기간	내용
2014년 상반기	기초연금 도입 전
2014년 7월~12월	2014년 기초연금 지급
2015년	2015년 기초연금 지급

노인가구 자산 기준 하위 70% 가구의 노인에 대해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20만원(2014년 기준 중앙, 지방 총 예산 6조 9천억 원), 2015년 기초연금 20만원(2015년 기준 중앙, 지방 총 예산 10조 8백 8십억 원)을 지급하며,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지출이 총급여액 만큼 감소하고, 노인 가구의 가구수입 중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래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미시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기 위한 가교행렬을 가구금융복지조사의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아울러 노인가구의 총 가처분소득 금액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계산된 2014년 기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구금융복지조사에서 노인가구/(노인가구+비노인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단위 : 십억 원

기간	내용
2014년 기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490,793.90
노인가구/(노인가구+비노인가구)	0.053373
노인가구 총처분가능소득(2014년)	79,567.48 (∵1,490,793.90 × 0.053373) - 2014년 기준 노인가구 가치분소득(거시사회계정행렬에서 는 이전거래) 가교행렬 구축 : 가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 10분위의 가치분소득 비중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표 18〉 노인가구 가치분소득 분위별 비중

소득 분위	비중
1분위	0.002745
2분위	0.029637
3분위	0.038577
4분위	0.04666
5분위	0.056063
6분위	0.068644
7분위	0.087761
8분위	0.115138
9분위	0.168951
10분위	0.385825
합계	1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먼저 2014년 상반기, 기초연금 도입 전 노인가구 분위별 가치분소득 분포는 노인가구 가치분소득 분위별 비중이 2014년 기준 노인가구 총처분가능소득을 각각 곱하여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때의 가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4944로 계산되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모두 이전거래의 특성을 지니고, 과세 제외 항목이므로 가치분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 19〉 2014년 상반기 기초연금 도입 전 노인가구 가치분소득 분위별 분포

(단위: 억 원)

소득 분위	가치분소득
1분위	2,184
2분위	23,581
3분위	30,695
4분위	37,127
5분위	44,608
6분위	54,618
7분위	69,829
8분위	91,612
9분위	134,430
10분위	306,991
합계	795,675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2014년 하반기, 2014년 기초연금(중앙, 지방정부 합계) 예산 6조 9천 억 원을 노인가구 하위 70%에 분위별(1분위부터 7분위까지) 모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인 가구 가치분소득 10분위 분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가치분소득 지니계수 역시 0.4322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이 때 노인가구 가치분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 각 분위에 동일한 금액 9천 8백 57억원(6조 9천 억원÷7)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을 때, 10분위 분포 변화와 함께 지니계수가 낮아져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 후(2014년 말) 노인가구 가치분소득 분위별 분포

(단위: 억 원)

소득 분위	가치분소득
1분위	12,042
2분위	33,438
3분위	40,552
4분위	46,984
5분위	54,465
6분위	64,475
7분위	79,686
8분위	91,612
9분위	134,430
10분위	306,991
합계	864,675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마지막으로 2015년 기초연금(중앙, 지방정부 합계) 예산 10조 8백 8십 억 원을 노인가구 하위 70%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10분위 분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역시 0.4067로 2014년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 경우는 2014년 기준 가처분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준 지니계수이므로, 2015년 총가처분소득 분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21〉 2015년 예산 기준 기초연금 지급 후(2015년 말)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분포

(단위: 억 원)

소득 분위	가처분소득
1분위	16,596
2분위	37,992
3분위	45,106
4분위	51,538
5분위	59,019
6분위	69,029
7분위	84,240
8분위	91,612
9분위	134,430
10분위	306,991
합계	896,554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론으로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하였는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마이크로데이터와 중위소득 등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국민계정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계정행렬을 통해서 이를 직접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결과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가구 하위 70%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가처분소득 10분위의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명확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이 많아지고, 하위분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22〉 기초연금 지급 전, 후 지니계수 비교

기간	지니계수
2014년 상반기 : 기초연금 도입 전	0.4944
2014년 7월~12월 : 2014년 기초연금 지급	0.4322
2015년 기초연금 지급	0.4067

5.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14년 가구금융복지조사와 2010년 가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여, 기초연금의 생산유발, 소득유발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효율화를 전제하여 다른 산업 부문으로의 정부지출 재원을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비율만큼 감액시켜 이를 기초연금 예산(2015년 기준 10조 880억원)으로 하여 노인가구 자산(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투입하고 기초연금 지급 전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 각 산업 생산유발계수와 가구 소득유발계수가 미세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다른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초연금을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파급효과보다 더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유발효과는 기초연금 지급 이후 모든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3), 도·소매 서비스(19)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26),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부문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지급 이후 모든 부문의 소득유발계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연금급여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기초연금의 소비 등으로 인한 경제순환에 따른 가구의 소득창출효과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달리 나타났다. 즉, 기초연금 지급 전후 모두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노인-비노인 가구 소득창출효과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소득창출의 세대 간 비중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의 비노인 가구 소득창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초연금을 지급한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기초연금 예산액을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70% 노인가구에 투입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지속 감소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즉, 2014년 기초연금 지급 이전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4944였으나, 2014년 기초연금 지급 이후 0.4322, 2015년 기초연금 지급 이후 0.4067로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사회보장성 현금급여)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진하나,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감소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경제성장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노인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연금의 경우, 경제순환에 따른 총소득 창출효과의 소득분위별 격차를 고려한다면 소득분위별 차등지급이 타당하다.

셋째, 인구 고령화로 노인계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경제순환경로로 경제와 선순환될 수 있는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 발전 방향 검토를 추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계정행렬을 구축, 적용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도입 효과에 대한 모형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기초연금의 다양한 발전 모색에 대한 정량적 연구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급여지출의 효과성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과 적용을 통해 증장기 분석의 기반 마련 및 검토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 설정을 위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제이·노용환·오미애·이우진·최현수·장인수·최요한(201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16.
- 고제이·유태현·이재원·조성규·주만수·손지훈(2014),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4-05.
- 노용환(2006), 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구조 분석, 경제분석, 12(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 67-106.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w.go.kr)
- 보건복지부 예산자료.
- 안근원·구세주·정지선(2011),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개발 연구(1),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11-02
-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발간예정).
- 통계청, 2010년도 가구동향조사 원시자료.
- 통계청, 2014년도 가구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 Defourny, Jacques and Erik Thorbecke (1984), *Structural Path Analysis and Multiplier Decomposition with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Framework*, Economic Journal, Vol. 94, No. 373, pp. 111-136.
- EC (2003), *Handbook on Social Accounting Matrices and Labor Accounting - Leadership group SAM*.
- Pyatt, Graham (1988), *A SAM Approach to Modeling*,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10, No. 3, pp. 327-352.
- Pyatt, Graham and Jeffery I. Round (1979), *Accounting and Fixed Price Multipliers 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Framework*, Economic Journal, Vol. 89, No. 356, pp. 850-873.

부록

기초연금 규모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비율 추이

- 2015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액은 7조 5,824억 원임
- 지방비 부담율이 201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2조 5천억 원이고, 기초연금 총액은 약 10조 1천억 원으로 예상할 수 있음

〈부표 1〉 기초연금 규모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초연금 예산 분담비율 추이 (2008-2015)

(단위: 십억 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율	지방비부담률
2008	2,209	1,591	619	72.0	28.0
2009	3,411	2,466	945	72.3	27.7
2010	3,711	2,720	991	73.3	26.7
2011	3,781	2,811	969	74.4	25.6
2012	4,004	2,982	1,022	74.5	25.5
2013	4,269	3,191	1,078	74.7	25.3
2014	6,900	5,177	1,723	75.0	25.0
2015	10,088	7,582	2,506	75.0	25.0

주: 2013년까지는 지급실적자료, 2014년은 보건복지부 내부의 최종예산자료, 2015년은 예산액 기준이며, 지방비 부담률을 2014년과 동일한 25.0%로 가정하여 합계를 산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4; 고제이 외(2014),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에서 수정 재인용.